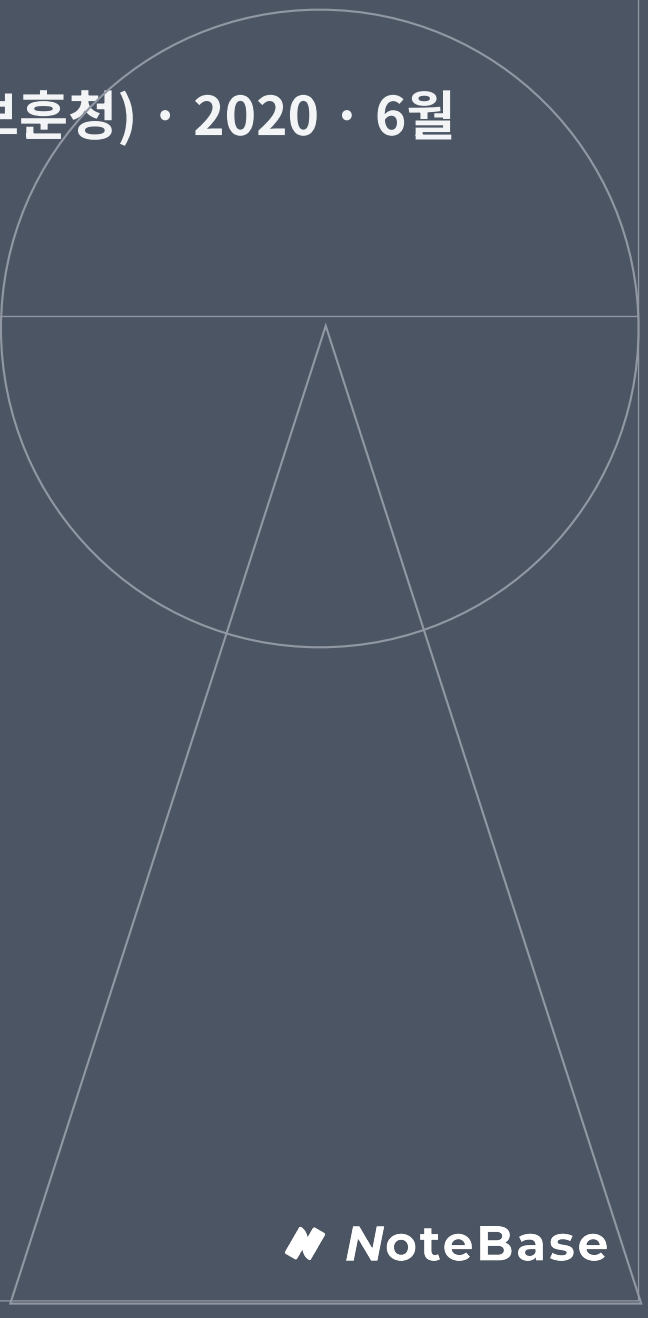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0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0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0 · 6월

문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 열목어는 연어과의 민물고기로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열목어 개체 수가 급감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인공 증식한 열목어를 방류하는 등 ㉢열목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산란기 체색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자연 현상으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 ㉠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지정은 인간의 판단과 의도가 개입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일반적인 경향 속에서도 예외가 나타나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지정과 ㉢의 열목어 복원 사업 추진은 생물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 의도가 개입하므로 사회·문화 현상이다. ㉡의 산란기 체색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나타나므로 자연 현상이다. 대상이 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이나 복원 사업까지 자연 현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① X: ㉠과 ㉢은 모두 **가치함축적**이다.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하는 일과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는 생물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다는 뜻의 '몰가치적' 특성은 ㉡과 같은 자연 현상에 해당한다.

② O: ㉡과 같은 자연 현상에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원인이 작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의지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일정한 경향은 있어도 예외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X: ㉢의 복원 사업 추진에는 '멸종 위기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당위 법칙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을 뜻한다. 반면 ㉡의 체색 변화는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이 아니라 자연의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④ X: ㉠뿐 아니라 ㉢도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사회·문화 현상에는 여러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시대·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함께 있다. 반면 ㉡과 같은 자연 현상은 같은 조건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NoteBase

문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반대이다.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만든 처벌 규정으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 행위와 형벌이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O: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법률 없이 관습법만으로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비난받아 온 행위라도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면 관습만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② O: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에 비슷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끌어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두 행위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

③ O: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어떤 행위를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막는다.

④ X: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처벌 규정이 제정되어도 **이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선지의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이와 반대이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유리한 신법을 적용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기>
갑(甲)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기관이 갑(甲)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정당 및 사회활동, 대인접촉 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甲)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 공해와 자동차 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 받고 있다.

① A는 소극적·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B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국가에 재판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여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는 **절차적·수단적 권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는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 수집으로 침해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관련되므로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지만, 열거적 권리가 아니라 **포괄적 권리**이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보호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O: B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사례의 재판 청구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거나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는 **절차적·수단적 권리**이다.

③ X: C는 환경 공해와 소음 공해로 침해된 환경권으로, 주어진 기본권 유형 중 사회권에 속한다.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관련되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④ X: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A인 자유권이 아니라 **B인 청구권**이다. 사례에서도 갑은 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정보 수집으로 침해된 자유권에 대한 구제를 구하였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영역 자체를 보호한다.

NoteBase

문 4. <보기>의 (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① (가)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② (나)는 사회 명목론이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명목론**으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 문화의 개선을 우선하는 (나)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이다. 이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이며,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 보는 것은 (나)의 사회 실재론이다.

② X: (나)는 뛰어난 직원도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므로 **사회 실재론**이다. 개인의 특성만으로 성과를 설명하기보다 조직 문화라는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과 성과를 제약한다고 본다.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는 것은 (가)이다.

③ O: 사회 명목론인 (가)는 사회 현상의 근원을 개인에게서 찾으므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면 성과가 좋아진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 실재론인 (나)는 개인의 노력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중시하며, 제시문에서는 조직 문화의 개선을 강조한다.

④ X: (나)의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특성을 단순히 합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자적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뛰어난 개인도 기존 조직 문화 속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 근거이다. 사회의 독자적 특성을 부정하고 개인들의 특성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가)의 사회 명목론이다.

NoteBase

문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관료제는 업무를 세분화하고 각 담당자가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료제는 업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② X: 근무 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탈관료제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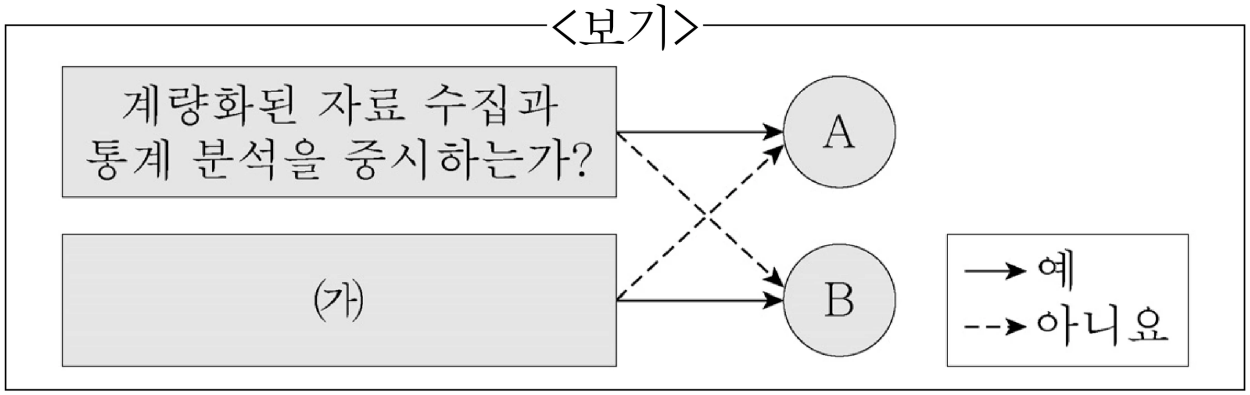
③ X: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모두 추구**한다. 관료제는 분업과 명확한 규칙을 통해,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효율성을 탈관료제만의 목표로 볼 수 없다.

④ X: 업무 수행 방식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탈관료제는 획일적인 절차보다 상황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6.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④ (가)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계량화된 자료와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 A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B는 인간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두 현상에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실선은 '예', 점선은 '아니요'를 뜻한다.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가?'에 '예'로 연결되는 A는 양적 연구 방법이고, '아니요'로 연결되는 B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가)는 B가 '예', A가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①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행위자의 내면과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인 B**의 특징이다. A는 자료를 수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X: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인 A**의 목적이다. B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맥락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③ O: A는 자연 현상처럼 사회·문화 현상도 관찰과 측정을 통해 규칙성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므로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B는 사회·문화 현상이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자연 현상과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④ X: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모두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다. 양적 연구는 설문 응답이나 관찰 결과를 수량화할 수 있고, 질적 연구도 면접이나 참여 관찰로 자료를 얻는다. 따라서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로는 두 방법을 구분할 수 없다. (가)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가?'처럼 B는 '예', A는 '아니요'로 답할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문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 을(乙) :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을은 국민의 동의와 신탁에 따라 자연권 보호를 맡긴다는 점에서 로크이다. 로크는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고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려 한 홉스이다. 을은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하는 데 따르는 불편을 해결하고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고 본 로크이다.

① X: 홉스는 개인들이 서로 계약하여 주권자를 세운다고 보며, **주권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민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자연권 보호라는 위임 목적을 저버리면 국민이 저항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로크이다.

② O: 로크에게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도록 맡겨진 권력이다. 한 기관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을 모두 가지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권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하여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③ X: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로크는 국민의 동의와 신탁에 기초하여 자연권을 보호하는 통치를 강조하므로, 을의 주장으로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제시한 것은 잘못이다.

④ X: 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홉스는 전쟁 상태를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로크는 자연 상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관리·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명의만으로 한쪽 배우자만의 재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부부별산제에 관한 설명이다. 혼인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이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사용·수익·처분한다. 민법 제830조·제831조에 따른 원칙으로, **혼인 자체가 모든 재산을 공동소유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② X: ㉡은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의 실질을 명의만으로 판단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협력에는 직접 소득을 얻는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포함된다. 따라서 '명의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부분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공동재산으로 고려한다'로 고쳐야 한다. 이는 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구별한다는 뜻이며, 혼인 중 모든 재산이 당연히 공동명의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설명이다. 부부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관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등 일상의 가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혼인만으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O: ㉣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설명한다. 한쪽 배우자가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거래하여 채무를 부담하면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미리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의 '별도의 의사 표시'는 이러한 대외적 표시를 뜻하며, 부부끼리만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NoteBase

문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보기>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① 탄핵 심판
② 권한 쟁의 심판
③ 위헌 법률 심판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국회가 만든 법률도 최고 규범인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는 제도가 **위헌 법률 심판**이다.

공통 해설

헌법은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되는 최고 규범이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이다. 밑줄 친 ㉠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지'이므로 이 제도와 연결된다.

다만 ㉠의 '먼저 확인'을 헌법재판소가 법안 통과 전에 심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이미 제정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즉, 입법 과정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과 제정된 법률을 사후에 심사하는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보기>
사회자: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① 갑(甲)
② 을(乙)
③ 병(丙)
④ 정(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의 사례는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경영 결정 자체**에 반대하여 교섭을 요구한 경우이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거절만으로 단체교섭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각 사례가 노동 관련법 위반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① O: 갑의 사례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위반한 피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회사 매출에 따라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3개월분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② O: 을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사례에서는 특히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등에 따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주휴일 없이 계속 일하게 할 수는 없다.

③ O: 병의 사례는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차별**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영이 어렵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X: 정의 사례는 노동 관련법 위반 피해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사업 확장 결정 자체가 곧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요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영 계획에 대한 반대이며, 고용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 변경에 관한 요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교섭 거절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경영 결정의 실행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거나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① (가)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가)가 속한 유형은 (나)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나)가 속한 유형은 (가)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는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미리 보험료를 분담하여 노령·장애 등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생활이 어려워진 뒤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장하므로 공공부조이다. (나)는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한 기금으로 노령·사망·장애에 따른 연금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회보험이다.

① X: 공공부조는 생계급여처럼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급여 등 현물적 지원도 제공한다. 따라서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② O: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모아 노령·장애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한다. 위험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부조는 이미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을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③ X: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모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간 소득을 재분배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에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구분은 맞지 않는다.

④ X: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 등을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수혜자에게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보기>에서 이익 집단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함
ㄴ. 특수 이익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ㄷ.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이 가능함
ㄹ.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익 집단은 정부 활동을 **감시·비판**하고, 구성원의 요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출**을 돕는다.

보기별 해설

이익 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여기서 O/X는 각 보기가 순기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ㄱ. O: 이익 집단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활동을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순기능이다.

ㄴ. X: 이익 집단이 구성원의 특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특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의 충돌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역기능**에 해당한다.

ㄷ. O: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동한다. 이는 개인이 혼자 전달하기 어려운 요구를 조직적으로 표현하게 하므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순기능이다.

ㄹ. X: 이익 집단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특혜를 얻으려 하면 정책 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사 전달이나 권력 감시가 아니라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역기능**이다.

순기능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ㄷ이므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보기>는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병(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기>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갑(甲)국	을(乙)국	병(丙)국
상층	20	20	15
하층	50	20	75

① 갑(甲)국의 계층 구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②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전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병(丙)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④ 갑(甲)국보다 을(乙)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을국은 중층이 60%로, 중층이 30%인 갑국보다 **중층의 비중이 크다**. 중층이 두터우면 상층과 하층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수치는 각 나라 전체 인구에서 상층과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 계층만 존재하므로 중층 비율은 100%에서 상층과 하층 비율을 빼서 구한다. 갑국은 100% − 20% − 50% = 30%, 을국은 100% − 20% − 20% = 60%, 병국은 100% − 15% − 75% = 10%이다.

① X: 갑국은 상층 20%, 중층 30%, 하층 50%로 아래 계층일수록 비율이 커지는 피라미드형이다.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구조는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인 병국이다. 중층이 얇으면 상층과 하층 사이의 격차와 대립을 완화하기 어렵다.

② X: 을국은 상층과 하층이 각각 20%이고 중층이 60%인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는 중층이 성장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형이다.

③ X: 병국의 중층은 10%로 상층 15%, 하층 75%보다 적다. 중층 부분이 양쪽 계층보다 좁으므로 **모래시계형**이다. 하층이 가장 많다는 사실만으로 피라미드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중층과 상층의 비율도 비교해야 한다.

④ O: 을국의 중층 비율은 60%로 갑국의 30%보다 높다. 중층은 **상층과 하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므로, 중층이 두터운 을국의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갑국의 피라미드형보다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3 대 1을 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구 편차 허용이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①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② 유권자가 자유 의지에 의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④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거구마다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데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인구가 많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가 갖는 영향력이 작아진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공통 해설

평등 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주는 것뿐 아니라, 각 표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미치는 **가치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두 한 표씩 행사하더라도 선거구에 따라 한 표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지면 투표 가치의 평등이 침해될 수 있다.

각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씩을 선출할 때,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비해 주민 한 사람의 투표 가치가 낮아진다. 제시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3 대 1 인구 편차 허용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러한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 때문이다.
따라서 ㉠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 선거 원칙이다.

판단 기준은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한가'이다. 자유 의지에 따른 투표인지,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지,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는 선거구 간 인구 차이로 생기는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민법」상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이 되어 있는 중혼이어도 상관없다.
ㄴ. 혼인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혼인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ㄹ. 혼인 당사자들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효한 혼인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혼인의사 합치**가 필요하며, **법이 금지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보기별 해설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

ㄱ. X: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재혼을 금지**하므로, 이미 혼인 중이어도 상관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ㄴ. X: 민법 제807조의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이다. 성년이 되는 만 19세와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다르다. 만 18세인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등 민법 제808조 제1항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면 혼인할 수 있다.

ㄷ. O: 혼인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로 부부가 되기로 합의해야 한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이므로, 혼인신고만으로 이러한 합의를 대신할 수 없다.

ㄹ. O: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의 혈족 등 일정한 친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 모든 친족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법에서 정한 금혼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는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가)~(다)에 각각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나)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다) 여러 문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① (가)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② (나)는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③ (다)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④ (가)는 변동성, (나)는 공유성, (다)는 전체성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사회 구성원이 생활 양식을 함께 지닌다는 **공유성**이다. 공통된 언어와 규범을 공유하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어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문화의 공유성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언어·가치·규범을 지니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공통된 생활 양식**은 원활한 상호 작용의 바탕이 된다.

② X: (나)는 앞 세대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문화 내용이 풍부해지는 **축적성**이다.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 변동은 전체성으로 설명한다. 여러 문화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X: (다)는 문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전체성**이다.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속성은 공유성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닌 생활 양식이 다른 사회의 생활 양식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④ X: (가)는 **공유성**, (나)는 **축적성**, (다)는 전체성이다. (가)는 구성원 사이의 공통된 생활 양식에, (나)는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문화 내용이 더해지는 데 초점이 있다. 변동성은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향하여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낡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새롭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진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①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②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③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④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기는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나아간다고 보는 **진화론**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곧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발전한다고 본다. 보기의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는 표현처럼, 사회 변동을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변화**로 이해한다.

② X: 운명론적인 입장은 **순환론**의 특징이다. 순환론은 사회나 문명이 생성·성장·쇠퇴·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는 운명론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은 흥망성쇠의 반복보다 일정한 방향으로의 진보를 강조한다.

③ X: 오랜 기간에 걸친 문명의 흥망성쇠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순환론에 해당한다. 진화론의 대표적인 한계는 변동을 발전으로만 이해하여 퇴보하거나 멸망한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④ X: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의 성장과 쇠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은 **순환론**이다. 진화론은 이러한 반복보다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는 국가 작용이 그 내용에 상관 없이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명목상 법률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B는 자연법, 정의의 원칙, 이성과 기본적 인권에 반하지 않는 요소를 강조하며 법적 형식을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본다.

① A는 법의 제정 절차보다 목적을 더 중시한다.
②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③ B와 달리 A는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를 필수 요소로 본다.
④ B의 실현 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는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므로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선지별 해설

A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국가 작용을 요구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B는 여기에 법률의 내용도 정의와 기본적 인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X: A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한지보다 **적법한 제정 절차와 법률에 근거한 통치**를 중시한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B인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X: B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통치의 합법성에 더하여 **법률 내용의 정당성도** 요구한다.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A인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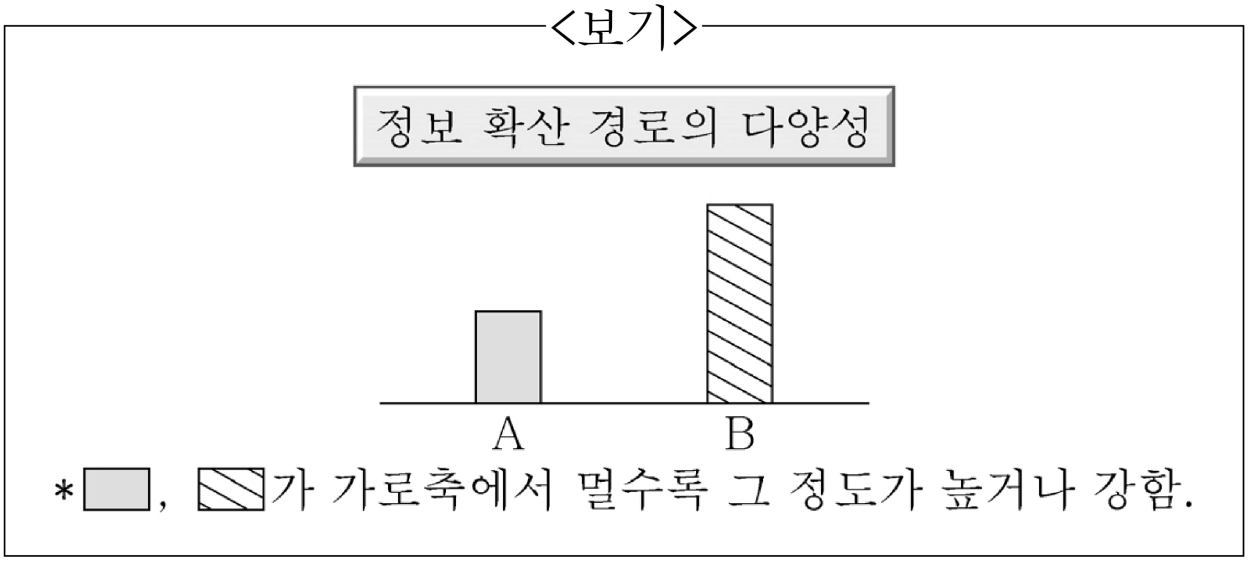
③ X: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A와 B의 공통점**이다. B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더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도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④ O: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이다.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법률이라도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면 통제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체의 내용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B의 실현 수단이다.

NoteBase

문 19. <보기>는 대중 매체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뉴 미디어와 인쇄 매체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B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② A는 B에 비해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유리하다.

③ B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④ B는 A에 비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보 확산 경로가 더 다양한 B는 **뉴 미디어**이다. 뉴 미디어에서는 정보를 받아 보는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므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은 막대가 가로축에서 멀수록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B의 막대가 A보다 높으므로 B는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정보가 퍼지는 뉴 미디어이고, A는 인쇄 매체이다.

① X: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더 쉬운 것은 **B인 뉴 미디어**이다. 뉴 미디어는 디지털 정보를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다시 활용하기 쉬운 반면, A인 인쇄 매체는 종이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수정하거나 재가공하기 어렵다.

② X: 쌍방향적 정보 전달에 더 유리한 것은 **B인 뉴 미디어**이다. 이용자가 댓글이나 메시지 등으로 반응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인 인쇄 매체는 발행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적 성격이 강하다.

③ O: B인 뉴 미디어에서는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하는 동시에 직접 글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역할이 비교적 구분되는 A인 인쇄 매체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④ X: B인 뉴 미디어는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곧바로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어, 인쇄와 배포 과정을 거치는 A인 인쇄 매체보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 선지의 '느리다'는 '빠르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0. <보기 1>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법률안의 제출은 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행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여당 의원들을 통하여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 2>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회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며,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의회가 입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견제한다.

ㄱ. O: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독립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시문에서 의회가 법률안을 제출·의결하고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 분립을 보여 준다.

ㄴ. X: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한다.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신임을 존립 근거로 하지 않는다.

ㄷ. O: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국민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신임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관계가 아니다.

ㄹ. X: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한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는 것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국가 원수인 군주나 대통령과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가 구분된다.

따라서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